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제5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 정부 -기업관계의 변화와 ‘삼성공화국’론- 송태수(한국산업노동학회)
- 삼성의 법조 지배 : 사례와 대안 - 김성진(참여연대)
- 삼성의 아파트 자본과 래미안의 공간지배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 삼성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

- 곽정수(한겨레 신문)
-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 김일현(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 박준영(아산 평학)

[사회]

-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단(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
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 시: 2014년 2월 7일(금), 오후 2-5시

장 소: 한겨레 신문사 3층 청암홀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기획 취지

대안연대회의는 2006년 초 삼성재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발제 원고들의 수정·보완을 거쳐 2008년 5월 조돈문 이병천 송원근이 편집하여 단행본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를 출간했다.

시민들은 삼성에 대해 세계적 기업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형상과 함께 불법·비리를 일삼으며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 형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시민들의 이중적 시각이 삼성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데 주목하여 삼성의 “빛과 그늘”에서 그늘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삼성재벌의 성장과 그 비용과 폐해를 분석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제시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삼성의 어두운 측면을 구성하는 불법·비리의 구조적 요인들 의 세가지 유형을 확인했다. 첫째는 총수 일가가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것, 둘째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 셋째는 삼성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과 법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가 출간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이에 삼성재벌의 문제점과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연구자·활동가들은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의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시즌2는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에 주목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부재가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 강화와 결부되어 우리사회에 가져다 주는 사회적 비용과 그 폐해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동 프로젝트는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발제문들은 토론회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2014년 6월 경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단(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문의: 조돈문(010-9414-3265, chodon333@gmail.com),
조대환(010-3710-7225, slw20131210@gmail.com)

제5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 정부-기업관계의 변화와 ‘삼성공화국’론 _____4p
- 삼성의 법조 지배 : 사례와 대안 _____8p
- 삼성의 아파트 자본과 래미안의 공간 지배_____20p
- 삼성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_____47p

정부-기업관계의 변화와 ‘삼성공화국’론

:의료 민영화를 중심으로

송태수(한국산업노동학회)

발전국가론의 주장처럼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상당 정도 발전한 산업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아직도 필요로 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민주화 주장도 그 요청의 하나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 주창자이자들은 경제 사령탑에서 사라지고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곡간에 있던 것들이 재포장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시 위기론과 그 극복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지원·육성하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그 하나로 제시되었다.

반(反)노무현으로 당선되고 집권 기간 내내 일관해왔던 이명박 정부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왔고, 현 박근혜 정부도 들고 나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허브’, ‘동북아 금융 중심지’ 등으로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일관되게 금융·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들을 추진해왔고, 그 하위 범주에는 의료민영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기획은 금융·경제부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회부문에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가져오는 국가개조의 성격을 보인다.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첨단화해서 세계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2004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영리법인화를 부분 허용하였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의

료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밑그림 작업에서부터 그 구체적 추진 과정에 삼성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알려진 바이다. 본고에서는 정책생산 및 결정과정, 정부부처 간 영향력의 변화 과정, 관료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특히 김영삼 정부와 1997/98년의 환란을 거치면서 관료제도는 이전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급격히 변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의 주도성이 가일층하게 된다. 의료의 공급과 재정 측면에서 발생하는 신규 시장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대기업의 영향이 강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을 꼽을 수 있다.¹⁾ 삼성은 의료 공급영역과 재원영역 즉, 민간 보험 영역에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민영화를 주창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스포츠서울닷컴》, 2011. 08. 24). 삼성은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인천 송도를 의료영역 진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민간보험(삼성생명), 원격진료 정보망 구성(삼성SDS), 원격진료 단말기(삼성전자), 송도국제병원(삼성증권, 삼성물산)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들에 삼성 계열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대로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통과 시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보험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건강관리 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IT산업과 의료산업을 접목시킬 여력도 있다.

이미 2005년 9월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를 공개하고, “삼성재벌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그들만의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²⁾ 즉, “삼성재벌의 ‘국가의료체계 해체 및 삼성의료체계 구축’ 음모가 현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즉, 삼성의 정책을 정부정책이 뒷받침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삼성의 사업영역이 확대·구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련 규제

1) 송이은 2012, “노무현 정부 이후 진행된 한국 의료민영화의 성격” [한국사회학] 제46집 4호 (2012년)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민의련)의 공동기자회견 내용(<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3918>; 검색일 2014.2.4.)

완화 △민간의료보험 세제 혜택 확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 등 삼성 생명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이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구분	삼성정책	정부정책 현황
일치하는 정책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서비스 관광 상품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의료기관 관련 규제 완화 ·첨단의학복합단지 조성 ·IT&T 접목 확대 ·삼성SDS 의료정보사업 확대 ·민간의료보험 세제 혜택 확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	- 추진 중 - 추진 중 - 추진 중 - 추진 중 - 추진 중 - 추진 중 - e-health 기반 확대도 추진 중 - 검토 중 - 검토 중
삼성 자체 요구 및 추진 정책	·~~요양기관당당자정제 폐지(요구)~~ ·서울삼성병원과 삼성생명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충(추진 중) ·의료 관련 통계 DB 구축(추진 중) ·진료비 청구·심사 기준 및 EDI 청구체계 구축(추진 과제) ·자체적인 보수지불제도 마련(추진과제) ·삼성의료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체계 구축(추진 과제)	

* 출처: 참세상(인터넷신문) 2005.9.1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3918>; 검색일 2014.2.4.)

2005년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내 건강보험TF에는 삼성생명 직원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료단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4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TF에는 김 모 삼성생명 차장과 강 모 대한생명 과장 등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애초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했을 뿐 아니라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와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미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송이은 2012, 222-223). 건강보험, 예방, 질병치료, 재활, 건강상담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전체를 HT(Health Technology)산업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기업들 위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이는 의료 전반을 산업화하는 방안이며,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시각에서 본 경제연구소 보고서가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의 연결되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인식전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수언론들은 의료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인식전환을 돕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4년 의료관광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집중적으로 영리병원 등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영리병원의 필요성과 IT, BT산업의 융합,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의 차질 없는 실시 ’ ’를 지시하였고 중앙일보가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이라고 비판하자, 복지부는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의 처리에 미온적이지 않음 ’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영리병원 밀어붙이는 4대 세력은 누구?” 《시사인》, 2011.8.8.).

2009년 삼성전자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비전 2020 ’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고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더해 ‘에이치엠이(HME) 사업팀 ’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칩을 몸 속에 심어 몸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U)헬스 ’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11.11.29). 원격의료, 건강서비스와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될 것에 대비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 나가고 있는 것이다(“삼성 ‘10년 뒤 먹고살 것’은 영리병원?” 《시사인》, 2011.8.8.).

의료민영화는 각 사업부문별로 속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의료 수가 체계가 변하거나 보험료율이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시스템과 복지체제, 사회관계들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는 것이다.

삼성의 법조 지배 : 사례와 대안?

김성진(참여연대 / 변호사)

I. 서론¹⁾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고 이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건,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크다고 본다. 국민들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는 재벌, 특히 삼성재벌이 심판판정에 순응하는 선수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심판판정 자체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바꿔내는 권력자로 부상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재벌, 특히 삼성재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액수만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 등 ‘돈의 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영역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재벌의 영향력에서 법조계 역시 자유롭지 않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은 인적 관계를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은밀한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특검 사건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삼성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결론까지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

1) 아하의 발제문은 필자가 《시민과 세계(2013년 하반기 23호)》에 게재한 줄고 ‘재벌공화국과 법조 지배-사례분석’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재벌의 법조 지배는 첫째는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서, 둘째는 법조인 고용, 대형로펌 선임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은밀한 로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재벌총수의 경우 횡령배임액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횡령배임액수가 몇 억 원에 불과한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정리해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을 다시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벌의 법조 지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삼성특검

1. 삼성 지배권 승계의 개요

삼성의 지배권 승계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졌다.

1)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이재용은 이진희로부터 현금 60억 8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1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재용은 이 돈으로 계열회사가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산 다음, 그 회사들이 상장되자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으로 563억 원을 얻었다.

2)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는 주당 8만 5000원대인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발행했다. 에버랜드의 주주들 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과 같은 주요 법인주주들은 모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고, 이재용은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판 돈 중 48억 원으로 그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재용은 31.9%의 지분(627,390주)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3) 1998년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000원에 구입하여 20.67%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및 삼성물산→기타 계열사로 바뀌었다.

2.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재판

이하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개요와 고소 이후 하급심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설명 하단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등 현재까지 드러난 주장들을 정리했다.

1)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거래가보다 저가로 발생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 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했다.

: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이 다 된 2003년 4월에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수사라인인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과 채동욱 특수2부장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이견희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송광수 총장은 대검 연구관으로 구성된 팀에 별도로 이의 검토를 맡겼다. 신상규 차장은 ‘기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대검 수뇌부에 전달했다²⁾.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서영제 서울지검장을 삼성이 관리했다³⁾.

2) 2003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송광수 총장과 신상규 차장이 대립하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낀 수사팀은 두 전직 사장을 먼저 기소하는 분리기소안을 내놓았고, 대검 수뇌부는 이 안을 받아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지휘를 내렸다⁴⁾. 송광수 총장도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⁵⁾

3) 2004년 8월 10일 사건이 특수2부(부장 남기춘)에서 금융조사부로 이관됐다.

: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시 이학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 검사가 특수 2부로 부임하자마자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금융조사부로 넘어갔다. 삼성에 대해 강공

2)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2013, 122~124쪽.

3)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212쪽.

4)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2013, 124쪽.

5) _____, 위의 책, 한겨레출판, 2013, 125쪽.

을 편 검사가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⁶⁾

4) 2005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허태학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2007년 5월 29일 두 피고인에게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 이용훈은 2004년 3월부터 삼성 변호인으로 선임돼 2005년 9월 대법원장이 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다⁷⁾.

3.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삼성특검의 기소

1)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4개월 뒤인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는 이견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오랫동안 로비를 해왔다는 취지로 양심선언을 했다⁸⁾.

2)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04년 1월경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이정훈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3) 특별검사로 선임된 조준웅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견희 회장을 기소했다.

: 조준웅 특검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 불법로비 등 핵심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 수사를 방기하고, 삼성 측의 일방적이고 상호 모순된 주장을 객관적인 입증근거 없이 수용해 기소하지 않거나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뇌물 공여자의 자백이 존재함에도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⁹⁾.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

6)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220쪽.

7)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2013, 126쪽.

8) _____, 위의 책, 한겨레출판, 2013, 127쪽.

9)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08, 2쪽, 4쪽.

채됐다¹⁰⁾.

4. 삼성특검에 대한 재판

1) 2008년 7월 16일 1심(재판장 민병훈)은 무죄를 선고했다.

: 기존 판례와 달리 이견희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라는 소신을 갖고 있던 민병훈 판사에게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배당했다. 이를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허만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후에 대법관이 된 신영철이었다. 이들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 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한 일에도 연루됐다¹¹⁾.

2) 2008년 10월 10일 2심(재판장 서기석)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2심 재판장이었던 서기석 판사는 2002년께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¹²⁾. 서기석 판사를 관리한 황백 제일모직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¹³⁾. 서기석은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3)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부문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심에서 이견희를 변호했기 때문에 판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유죄의견인 대법관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김영란 5인이었고, 무죄의견인 대법관은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양승태, 신영철 6인이었다.

: 사건이 배당된 2부에서 유죄의견을 가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례 없이 소부를 개편해 삼성에버랜드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대법원 2부에서 1부로 재배당한 뒤, 박시환 대법관 없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¹⁴⁾. 박시환 대법관이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 지 5개월 만에 전원합

10)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2013, 132쪽.

11)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94쪽, 380쪽.

12) ———, 위의 책, 사회평론, 2010, 175쪽.

13) ———, 위의 책, 사회평론, 2010, 101쪽, 175쪽.

14)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2013, 145쪽.

의체에 회부될 수 있었다¹⁵⁾. 비록 5대 6으로 무죄결론이 났지만, 무죄의견을 낸 김지형 대법관은 특검이 ‘계열사로 하여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행위를 기소했다면 유죄’라면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잘못¹⁶⁾이기 때문에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기소를 비판했다.

III. 재벌의 법조 지배 수단

1. 불법적 뇌물 수수

삼성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조계를 포함한 권력기관 요소요소에 불법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이 직접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1)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전 의원은 옛 안기부 도청 녹취록인 ‘X파일’에서 삼성과 중앙일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거론된 고위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¹⁷⁾(노회찬 전 의원은 이에 인한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로 의원직을 잃었다.)

2) 2007년 11월 3일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의하면 이건희는 ‘돈을 받지 않는 권력자에게는 와인이나 호텔할인권을 건네주라’라고 지시했다.¹⁸⁾

3)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04년 1월경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이경훈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¹⁹⁾.

4) 추미애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삼성 직원 한 명이 선거사무실로 현금 1억 원이 든 골프가방을 갖고 와 돌려보냈다”는 서면진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²⁰⁾

15) _____, 위의 책, 한겨레출판, 2013, 148쪽.

16) _____, 위의 책, 한겨레출판, 2013, 143쪽.

17)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08, 25쪽, 26쪽.

18)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08, 25쪽, 26쪽.

19) _____, 위의 책, 2008, 25쪽, 26쪽.

20) _____, 위의 책, 2008, 25쪽, 26쪽.

5) 2007년 11월 1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회견에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당시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당시 국가청렴위원장이 삼성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²¹⁾.

6)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당시 의원은 임채진 총장이 삼성 고위 임원들과 자주 골프를 쳤다는 제보내용을 소개했다²²⁾.

2. 법조 요인의 채용

재벌들은 고위 법관과 고위 검사 출신들을 사외이사나 법무팀으로 스카우트해서 고액의 연봉을 직접 지급한다.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20대그룹 사외이사 489명 가운데 2개 기업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은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조계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이 20명이나 돼 재벌 그룹들이 방패막이용으로 실세형 인사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²³⁾. 삼성전자와 두산 사외이사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송광수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검찰총장을 지낸 대표적 권력기관 수장 출신 사외이사다²⁴⁾.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법원과 검찰의 인사철이 되면 삼성 구조조정본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퇴직한 판검사들을 고문 변호사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하고, 직접 영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형사건을 맡기면서 관리를 했다고 한다.²⁵⁾ 이는 공직에 재기용됐을 때를 대비한 뇌물이며, 삼성에버랜드사건을 변호한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경우라고 한다.²⁶⁾

3. 대형로펌 선임

대형로펌 역시 고위 법관과 고위 검사 출신들을 고액에 스카우트한다. 2012년

21) 프레시안 특별취재팀, 《삼성왕국의 계릴라들》, 프레시안북, 2008, 58쪽;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2008.

22)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174쪽.

23) CEO스코어데일리, 2013,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173>(검색일: 2013. 5. 29)

24)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173>

25)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256쪽.

26) ———,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257쪽.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그해 퇴임한 판사와 검사 125명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로펌에 재취업했다²⁷⁾. 검사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0년 7월 검사장에서 물러나 그해 9월부터 헌법재판관에 지명되기 전까지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4개월 동안 총 2억 4500만원, 월평균 6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²⁸⁾.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 태평양으로부터 월 1억 원을 받았다²⁹⁾.

이런 전관에 대한 고액 스카우트에 대해 민경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단지 수사와 업무의 자문만을 위한 것이라면 엄청난 고액의 자문료를 주고 최고위직 출신의 공직자를 여러 명씩 영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을 때 알게 된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 사건 유치나 업무 처리 등 로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로비가 불법인 상황에서 대형로펌만 로비스트를 편법으로 활용해 많은 사건을 선임하고 로비를 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³⁰⁾

박범계 의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이익을 변론하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들이 퇴임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짝꿍이해 소속변호사 내지 고문으로 두면서 관료조직과 사법조직을 연계시키는 게 문제다. 대기업 이익이 법과 제도로 관철될 수 있는 ‘삼각동맹’이 형성돼있는 것이다.”³¹⁾

VI. 재벌총수의 양형 문제

27) 강철원·김영화 외, 《전관예우 비밀해제》, 북콤마, 2013, 1쪽.

28) 뉴스토마토, 20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2212>(검색일: 2013. 4. 9)

29) 중도일보, 2013,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2280239(검색일: 2013. 2. 28)

30) 민경한,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나래짓, 2013, 260쪽.

31) 뉴스토마토, 20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2212>(검색일: 2013. 4. 9)

재벌총수의 경우 횡령배임액수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소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단돈 몇 억 원만 문제되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된 액수가 많을수록 자유의 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횡령배임죄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확인한 결과, 일반 배임횡령에 비해 액수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배임죄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71.1%이고, 일반 횡령배임죄의 경우 그 비율이 41.9%로 나타났다³²⁾. 항소심까지 고려하면 전자의 비율이 83.9%에 이른다³³⁾. 이러한 사법부의 총수 봐주기 판결 경향은 유전무죄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다. 사례를 본다.

1) 삼성특검 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배임죄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 이사회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6차례에 걸쳐 불기소했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에서야 삼성특검에 의해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비로소 이뤄졌다. 1심과 2심은 각각 면소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액수가 22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확정됐고,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배임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임원과 공모하여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그 중 696억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개인보증 채무를 회피하고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07년 9월 6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32) 이상훈, 2008, <배임횡령 범죄에서의 바람직한 양형 판단은 무엇인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토론회 자료집 21쪽.

33) 김상조, 《총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2012, 192쪽.

이런 총수 봐주기 판결 경향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나는 반기업적인 법조인이요’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런데 대형 로펌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재벌 대기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판사를 영입할 만큼 큰 로펌이 얼마나 될까.³⁴⁾ 분위기가 이러니까 현직 판검사들 역시 변호사 개업 이후를 대비해서 재벌에게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몸을 사린다. 주류 집단 안에서 ‘왕따’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다.”³⁵⁾

V. 재벌의 법조 지배 완화를 위한 제안³⁶⁾

1.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리하기로 한다.

1) 현행법은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취업제한의 예외로 정해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17조 제6항). 이래서는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지 못한다. 변호사의 로펌 취업에 대한 예외를 삭제해 로펌 취업을 원할 경우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이 상당하다.

2) 동법은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를 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제1항 제1호), 김앤장로펌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사업조직에

34)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389쪽.

35) ———, 위의 책, 사회평론, 2010, 390쪽.

36) 재벌의 법조 지배 완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재벌의 비자금 조성을 막고, 재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이 실제로 견제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다만, 이하에서 소개하는 방안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외에 법조 고위 인사들의 불법적인 재벌 봐주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취업하는 것을 전혀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본금 또는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를 정해야 한다.

3)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퇴직공직자와의 업무상의 접촉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만남의 시기와 장소, 목적을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현행법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문제 삼고 있으나(제15조), 떡값 논란과 같이 공정한 공무수행을 해치는 수준의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 하여금 어느 누구로부터도 경조사비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금전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정형 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배임액수가 50억 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1호).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재벌 총수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을 반으로 깎아준 결과이다. 이런 법원의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 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은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던 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VI. 결론

재벌이 돈의 힘을 앞세워 뇌물수수, 직접적인 고용이나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통해 고위 판검사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의 예외로서 군림하고 있음을 보았다. 국민들은 이 현상을 빗대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검찰

공화국', '김앤장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이름 붙임 자체가 자조적이거나 이렇게 왜곡된 지배구조를 깨뜨려나가야 한다는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재벌 총수가 불법행위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엮어낸 법조인들을 내세워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재벌의 법조 지배를 혁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한 것이고, 당연한 정의의 요청이다.

참고문헌

- 강철원·김영화 외. 2013. 《전관예우 비밀해제》. 북콤마.
- 김용철. 2010.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 민경한. 2013.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나래짓.
- 이춘재·김남일. 2013. 《기울어진 저울》. 한겨레출판.
-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 프레이션 특별취재팀. 2008.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프레이션북.
- 김상조. 2012. 《총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 뉴스토마토. 2013. 토마토인터뷰 - 박범계 의원 "한국은 김앤장공화국".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2212>(검색일: 2013. 4. 9)
- 중도일보. 2013. 새정부 초대 장관 인사청문회 “황교안 로펌월급 1억 전관예우”.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2280239(검색일: 2013. 2. 28)
- CEO스코어데일리. 2013. 20대그룹 사외이사 '점직' 83%가 '권력형'...검찰·국세청장 '상종가'.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173>(검색일: 2013. 5. 29)

삼성의 아파트 자본과 래미안의 공간 지배 :이문동의 모순 사례

전규찬(영상원 방송영상과)

1. 들어가며: 삼성/물산이라는 래미안의 건축 주체

1995년 한국에 문화연구라는 게 막 태생하고 있을 무렵, 문화평론가 황동길은 다른 문화연구자들과 함께 서울 공간 문화를 논하면서, “서울의 외곽에서 서울의 내부로 걸어들어 왔던 경로를 뒤밟아 가보자”고 제안했다.³⁷⁾ 중심의 신화와 중심을 지배하는 자본/권력의 논리에서 벗어나 주변/바깥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신자유주의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2013년 현재도 유효하다. 신화가 아닌 현실의 문화, 지배적 자본에 의한 삶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맞서는 저항하는 도시 인·민 대중들의 목소리와 몸짓은 서울 주변부 외곽에서 보다 실감 가능해 보인다.

이 글은 도취되기 쉬운 환상의 이미지를 지닌 한 명품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다. 뉴타운 계획에 편승한 삼성물산의 아파트 건축에 관한 르포타주이며, ‘다가올 미래의 평안’한 가족 아파트를 위해 재개발에 앞장서는 자본의 운동에 관한 비판적 저널리즘이다. 축적의 욕망과 입주의 갈망이 합작할 때 빚어지는 무리(無理)와 폭력에 대한 고발이며, 그에 반발하고 대항하는 소수자·약자 주변부 인·민들의 연합적 움직임에 관한 보고서다.

37) 황동길(1995). ‘봉천동, 가난의 문화정치학’, 이재현 외 『공간의 asn화정치: 공간 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p.107

그 모순과 갈등의 현실을 서울 동북부 어느 빈난한 지역에서 탐사해 본다. 주변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물산)이라는 중심부 권력의 지배 양상이다. 이 글에서 래미안은 투자가치 높은 ‘명품’ 아파트를, 그리고 이들 상품이 내포한 환상과 신화, 이데올로기, 판타스마고리아적 성격을 대표한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은 자신의 축적·재생산을 위해 아파트 건축과 도시 개발, 생태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대 자본을 상징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삼성(물산) 래미안의 특별한 이야기이자 재개발 토건자본 일반의 이야기다.

그렇게 석관동·이문동의 천장산·의릉·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둘러싼 래미안 벨트 구축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한 편으로 주민 자율주의 전선의 공간문화정치를 기록에 남기는 게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낡고 오래된 집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 행복한 도시생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자본/국가의 환상은, 뉴타운은 생활의 몰락과 인구의 추방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과 충돌한다. 강북의 구도심을 아파트의 숲으로 바꾸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분리와 슬럼화의 길을 예상하는 사람들과 모순을 빚는다. 래·미·안이라는 삼성물산의 판타스마고리아는 왜 이문동과 석관동에서도 갈등을 빚지 않으면 안 되는가?

2. 삼성/물산의 아파트 공화국, 삼성물산의 내수 귀환

삼성(三星). 이견희 일가의 ‘재벌(財閥)’과 삼성은 일정하게 구별된다. 삼성은 한국이라는 민족/국가의 경계로 환수될 수 없는 초국(가)적 자본이다. 전지구적 활동 반경을 지닌 세계 몇 위의 복합기업체(conglomerate: 콘체른)에 해당한다. 일반에게는 ‘그룹’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친숙한 데, 이로써 그 수직적 지배와 교차적 조합의 구성 규모 및 활동 반경을 기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각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룹에 해당하며,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룰 삼성물산도 그 자체 하나의 거대그룹으로 봐야 한다.

〈그림: 삼성물산의 로고〉



삼성물산

*출처: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물산. 이견희의 아버지이자 전 삼성 회장인 이병철에 의해, 1951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다. 삼성의 모태 기업은 1938년 3월 자본금 3만원으로 설립된 삼성상회였다. 해방 후 이병철은 상회의 사업규모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는데, 1948년 11월 종로 한 복판에 삼성물산공사를 세운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국내 무역업계 1위에 오를 것이며, 한국전쟁 와중이던 51년에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69년에 에티오피아에 군복을 수출하고 70년에는 댄디(Dandy)신사복을 만드는 제일복장(주)을 수립하다.

박정희에 의한 근대화가 정점에 달했던 1975년 국내 최초의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받는다. ‘제일정신’을 기업 모토로 한 이병철이 매년 초 동경에 가 ‘구상’이란 이름으로 학습한 일본 대기업 활동의 모델을 그대로 국내에 옮겨온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가져다 팔고 또 들여오는 종합무역상사의 시대가 국내에서도 개막하며, 삼성물산은 해외 수출과 국내수요 상승의 바람을 타고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된다. 한편 그룹 내에서도 삼성물산은 해외 무역 창구로서 거의 모든 수출입을 맡아하고 있다.

그러한 안팎의 조건을 기초로 해서 삼성물산은 탄탄대로 성장을 거듭한다. 1975년 제1회 수출의 날에서는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의 주 수출품은 섬유류였다. 이듬해인 1976년에도 1억 1백 만 불의 섬유 군복류를 수출하여,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낳은 대표적 제국주의 전쟁이자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논란이기도 한 베트남 참전의 이득을 크게 본 셈이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삼성은 70년대 들어 섬유산업으로부터의 사업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삼성코닝(73년), 삼성전기(73년), 삼성중공업(74년), 삼성석유화학(75년), 삼성조선(77년), 삼성항공(77년)을 잇달라 설립한다. 77년에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수출 품목도 다변화 될 것인 데, 가령 78년 리비아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만든 병원선 12척을 수출하는 식이었다. 아울러 이때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건설 붐이 폭발하는 시점이었는데, 삼성물산도 빠르게 움직여 1977년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사업 환경의 변화와 삼성 및 삼성물산의 동시적인 사업 확장에 힘 입어, 삼성물산의 수출액은 77년 들어 5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그리고 3년이 지나 80년에는 10억 달러로 그 액수가 증가하여, 두 배의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삼성물산이 77년에 설립한 삼성종합건설이 큰 역할을 한다. 1981년 리비아 석유저장 플랜트를 7천 5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한 삼성종합건설은 1982년 들어 해외 공사 수주 10억 불탑을 당당하게 수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6년, 삼성물산은 매년 거의 두 배의 수출액 증가를 거듭하여, 1988년 국내 기업 최초로 50억 달러 수출의 금자탑을 이룬다. 제31회 무역의 날에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것도 채 몇 년이 걸리지 않는다. 1994년 11월의 일이니, 2억 달러 탑을 쌓은 75년에서부터 시작해 정확히 20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1995년 12월에 삼성물산은 삼성건설로 이름 바꾼 자본금 3,187억원의 이 회사를 흡수 합병한다. 그리고 97년에는 울진 원전5호기 공사수주로 원전 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다.

삼성물산이 국내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쯤인 것으로 파악되다. 1997년 11 Samsung Plaza 분당점을 오픈하면서, 백화점 사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인 데, 주력인 건설 부문과 함께 ‘주택개발 부문’을 신설한다. ‘건설’이 아닌 ‘개발(development)’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도시 재개발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명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에 맞춘 주택의 공급이 아닌, 주택의 건설에 따른 수요의 생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까?

수출도 꾸준히 늘어, 1998년에는 150억 수출의 탑 수상이다. 2004년 5월에는 대만 최고층 빌딩 타이페이 금융센터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두아이드 준공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수출은 그 사이에도 계속 늘어났을까? 흥미로운 것은, 수출 급성장 홍보의 기록을 삼성 홈페이지에서는 2000년대 들어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2001년 ‘세계 최초 3차원 자정식 현수교 영종대교 준공’, 2005년 ‘국내 최장 인천대교 수주’의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이제 삼성물산은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 않는다. 유통과 금융, 에너지, 자동차 판매, 영상 사업, 그리고 건설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상품 종합 도매업’이라는 공식적인 사업 종류는 삼성물산의 실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전자재료, 석유, 가스, 석탄, 플랜트 공사, 빌딩건축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아파트 공사를 주 취급 품목으로 하는 삼성물산은 ‘물산(物産)’ 이상의 재산(財産)을 창출하는 삼성의 신체가 되었다.

〈그림: 신월성 2호기와 1호기의 모습〉



* 출처: 삼성물산

특히나 1,200조에 이르는 세계 거대시장인 “원전은 회사의 미래 전략 사업이다.”³⁸⁾ 삼성은 UAE 등 중동으로의 진출을 서두르면서, 국내 시장도 놓치지 않는다. 1998년 울진 원전 5·6호기 시공 참여로 시작된 삼성물산의 국내 원전 건

38) <한국일보> 2010. 1. 28. ‘신공법 개발 공사기간 단축’.

설 참여는 2004년과 2005년 5호기와 6호기를 각각 준공하면 구체화된다. ‘한국 표준형 원전’을 최단기간에 완성하는 기술력을 보인다. 이후 신월성 발전 1·2호기 건설 사업도 국내 업체들과 공동 수주, 용접 등 새로운 공법을 선보일 것이다. 신월성 2호기는 역대 최단기간 공사 기록을 새롭게 갱신한다.

삼성물산은 그 자체 거대한 자본이다. 2011년 현재 삼성물산의 자산은 20조 9,220억 원에 이른다. 국내는 물론이고 50개국 133개의 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같은 한 해 삼성물산이 올린 매출액은 무려 21조 5,455억 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4,091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밝혔다.³⁹⁾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이다. 삼성물산은 그렇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대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으로서 삼성이라는 더욱 거대한 초국적 기업복합체를 구성한다.

이중 건설 사업을 통한 매출은, 국내 아파트 공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래미안 아파트 건설을 통해 올린 수익은 과연 얼마가 될지 파악하긴 힘들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래미안 아파트 건축을 포함한 국내 건설에 진력중임을 엿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주택사업은 건설부문을, 그리고 건설부문은 삼성물산이라는 자본을 결정적으로 확대 재생산한다. 자본 증식과 이윤 확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자본으로서,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과 아파트 양산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 거주생활양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문화의 지배는,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수익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님에 틀림없다.

2010년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삼성SDI이다. 주식의 7.18%를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삼성화재보험으로서, 4.65%다. 따지고 보면 12%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율의 순환출자를 통해 이견희 일가는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도심 개발을 주도하며 전국 각지에 아파트공화국 래미안을 지어 올린다. 그리고 이 래미안은 지자체/정권의 뉴타운 개발과 접합하여 서울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構築)하게 될 것이

39) <http://www.samsungcnt.co.kr>

다.

3. 서울/강남, 래미안 ‘명품’ 단지 구축의 특별한 장소

현재 삼성물산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철강과 화학 등 산업 소재는 물론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석유 및 가스 광구 탐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사 부문이다. 보다 주목할 두 번째는 건설 부문인데, 건축 사업과 토목 사업, 플랜트 사업 그리고 주택 사업 등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다시 쪼개진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빌딩인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빌딩과 함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교통센터,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건축 사업이 이룬 대표적 실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바로 이 논문과 직결되는 주택 사업을 보자. 삼성물산 공식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래미안 브랜드를 도입, 삼성물산은 래미안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마른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상업 시설이 복합된 트라펠리스 시리즈로 주거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새로운 상품개발과 전략적 마케팅,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자랑한다.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로 브랜드 부가가치를 올릴 것이며, “주거문화의 리더로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⁴⁰⁾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목동 트라펠리스, 용산 파크타워,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등을 대표 실적으로 올려놓고 있을 것이다. 그 중 갤러리아팰리스는 아파트 741세대와 오피스텔 720세대로 구성된, 지하 5층 지상 46층의 초고층 조상복합이다. ‘지주공동’ 상품에 해당한다. 49층으로 더 높은 목동 트라펠리스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 프랭크 윌리엄스(F. Williams)가 외관을 설계했다. 2009년 <매일경제>가 뽑은 주상복합 부문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파크타워는 용산 한강로 주변 최초의 재건축 주상복합 파크타워다.

남산에는 트라펠리스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듯 삼성물산은 여러 다양한

40) <http://www.samsungcnt.co.kr>

초고층 최고급 팰리스palace: 궁전)들을 시내 곳곳에 건축한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많이 들어설 삼성의 궁전들은 한국 대도시 서울의 부르조아 ‘주거문화’를 말 그대로 선도할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삼성은 고부가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래미안 아파트의 공사에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궁전에 입성할 수 없는 훨씬 많은 수의 도시 중산층들을 ‘다가올 미래의 평안(來未安)’의 공동체 내부로 꾸준히 흡수·유인한다.

사실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아파트다. 2008년 7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9년 연속 종합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할 것이며, 그 명성은 2013년 지금까지도 이어져 1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고수한다. 그러한 인정은 래미안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고, 이 아파트에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기입하며, 여타 아파트로부터도 차별화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할 것이다. 래미안의 고유한 브랜드 파워는 일정하게 자격을 갖춘 소유주·입주자들의 경제력과 결합하면서, 이 아파트의 공간적인 팽창을 더욱 부추긴다.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들과 구별된 래미안의 소유를 욕망하고 또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된 단지 내 ‘다가올 미래의 평안’의 환상을 갈망한다. 래미안으로의 입주는 전국 대도시에서와 같이 서울에서 중산층 상승을 꿈꾸는 수많은 시민 대중들이 지닌 희망의 목적지이며 아파트 거주생활의 신화적 대상이다. 이상향이다. 외벽에 밝게 새겨진 ‘래미안’이라는 이름은 이 아파트가 단순히 물질적 건축물인 것 아니라 환상이자 스펙터클 그 자체임을 도시 전방에 걸쳐 입증할 것이다.

『공간의 시학』에서 바슐라르(G. Bachelard)는 집에 대해, 모든 특별한 가치들을 집약한 일종의 근본적 가치의 공간으로 설명한다. '본원적 조개껍질(the original shell)'이다. 인간의 사고와 기억 그리고 꿈을 통합하는 가장 큰 힘이며, 이 통합을 낳는 일차적 원칙이 다름 아닌 백일몽 혹은 몽상(daydream)이라고 정의 내린다. 삼성공화국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족의 환상과 가정의 공상, 그리고 이상적인 집의 몽상은 고적한 지하실이나 혼자만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다락방에서가 아닌, 바로 이런 일상의 신화와 보편화된 스펙터클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생산된다.

삼성이 가족을 호명한다면, 래미안은 이상적인 가정/집이 된다. 그런 욕망 덩어리이자 물신화된 상품이며, 환상 자체인 래미안이다. 그래서 래미안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삼성/자본의 축적의도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림; 래미안 광고 중 일부〉



* 출처: 삼성물산

‘국민’ 인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의 생명권력/통치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고, 시민사회 내부의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 (반)여성주의 등과도 치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생태주의, 자연주의 등의 통합은 이런 신화의 구축을 더욱 ‘자연스럽게’ 은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래미안을 향한 대중 소비자·소유자의 욕망을 생산하고 또 그 욕망을 실제 상품으로써 충족·공급시켜줌으로써, 그러한 과정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와 ‘명품’의 담론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삼성물산은 전국 각지와 서울 전역에 래미안의 닫힌 커뮤니티를 확대·팽창시켜 나간다. 말을 바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싸게 땅을 구입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그것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자본의 지속운동을 통해 삼성물산은 지금의 20조 자산, 21조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그림: 위례신도시 레미안 위치도〉



* 출처: 삼성물산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선 첫째, 레미안 아파트는 단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규모가 큰 것이며, 그 정도의 땅을 사들이고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대체 삼성물산이 레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갖고 있는 대지는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사실은, 레미안 단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에 무려 51개 단지, 그리고 경기도에 그 절반인 24개 단지가 분포한다. 후자의 경우, 용인 신도시에 7개 단지로 레미안 아파트가 가장 많다.

삼성물산은 서울의 유일한 강남권인 위례신도시의 구성에도 적극적이다. 사실 레미안 위례신도시 참여는 삼성물산의 공간 점유 전략을 핵심적으로 잘 드러낸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녹지환경이라는 주거의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이른바 ‘휴먼링’ 안에 위치함으로써 위례신도시 핵심 특화계획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아파트의 투자가치는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것으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바, 바로 이러한 핵심특화계획의 특별한 활용을 통해 삼성물산은 고유한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상하게도 경기도 외 지역에는 래미안이 거의 없다. 대구에 5개 단지, 울산에 4개 단지, 대전에 1개 단지를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부산과 인천, 광주와 같은 광역시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부산의 경우, 고층·고평수의 ‘래미안 해운대’ 745 가구가 2011년 최초로 분양되었는데, 2014년을 입주 예정으로 하고 있다.⁴¹⁾ 인천 또한 1,281 가구의 지하 3층 지상 33층 ‘래미안 부평’이 2014년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이다.⁴²⁾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삼성물산이 수도권 바깥의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따르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겠는 데,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든 부인하기 힘든 것은, 래미안이 서울 내부와 그 주변에 집중 분포한다는 사실이다.⁴³⁾ 고가 ‘브랜드’의 서울 집중은 대중들의 집단 소망과 아파트 투자 열기와 맞물리면서 고질적인 서울중심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공화국과 래미안공화국의 등치. 이미지/신화 차별화 전략이 거둔 주효한 효과라고 봐야 할까?

4. 강북 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와 래미안 개발 사업

래미안은 서울에 많다. 더욱이나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로 대표되는 소위 강남 지역에 래미안 단지가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다. 우선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에는 4개 단지가 있다. 여기에 역삼동과 삼성동 그리고 도곡동을 중심으로 9개 단지가 들어선 강남구를 덧붙이면, 강남은 래미안의 중핵지대로서 또렷이 부각된다. 강남에 속한 총 13개의 래미안 단지들은 모두가 2000년대에 들어서 집중 건설된 것들이다. 2001년 732 세대의 도곡 삼성래미안이 299 세대의 서초 삼성래미안과 함께 들어선 후, 2006년을 전후로 해서 서초동과 삼성동에는 2차, 3차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

41) <조선비즈> 2011. 11. 10. ‘부산에서 최초로 분양하는 삼성 래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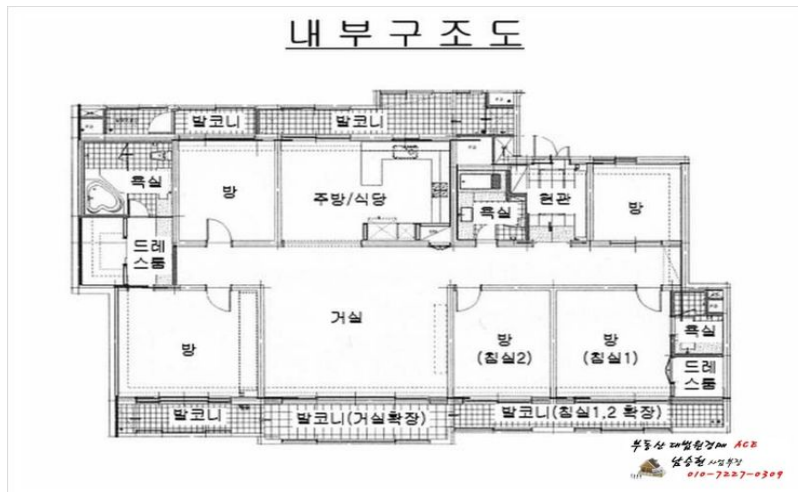
42) <MK 뉴스> 2013. 2. 14. ‘삼성물산 ‘래미안’ 부평’.

43) 이상의 자료와 아래의 데이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을 하여 얻은 것으로, 정확하게 실재와 일체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유토피아의 아파트, 아파트의 유토피아 래미안. 반포2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를 한번 보자. 반포동 최고의 아파트 단지다. 163,747 평방미터의 연 면적에 2,444억 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간 대규모 재건축 상품이다. 2006년부터 대략 3년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2009년 입주가 시작되었다. 지하 3층과 지상 32층, 총 28개 동의 아파트에 2,444의 세대가 입주해 있다. 1000세대를 넘으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자타 공인 반포의 ‘랜드마크 아파트’다. 10억대의 26평형에서 35억을 호가하는 81평형의 서초동 최고가 아파트다.

18평과 22평형 주공아파트로 직조된 반포의 풍경은 3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완전하게 탈골쇄신한 풍치를 이룬다. 부동산의 투기와 재산의 편중은 래미안을 이전의 아파트 단지와는 크게 다른, 출입 통제와 외부인 감시가 엄격한 일종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로 만들어 놓는다. 물론 그 내·외부 폐쇄성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건축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큰 평수로 짜여진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림: 래미안퍼스티지 72평형 아파트 내부 구조도〉



*출처: 부동산 대법원 경매 ACE

래미안은 강남을 더욱 더 강북과 분할된 공간으로 만들어간다. 바로 그러한

구별의 능력으로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강남에서 래미안은 말 그대로의 미래다. 반포 등 여러 군데에 ‘명품’ 아파트의 입지를 미리 정해 놓고 있다. 17개 동 1,608 세대의 래미안 대치 청실이 대표적인데, 공사금액 3,975억 원의 재건축 상품으로서, 2009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20개 동 1,020 세대의 강남 래미안 힐즈도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끝날 예정으로 한참 공사 중이다. 이렇듯 래미안은 말 그대로의 미래형 아파트로서 강남의 대지를 파고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와 주변 공간의 가치를 더욱 올려놓을 것이다.

스스로를 특별화한 브랜드 래미안과 서울 속 심리/지리적으로 차별화된 공간인 강남의 접합. 이 두 주도적 신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결부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와 투자 욕망, 신화적 이미지를 더욱 고양시킬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래미안은 인근 여타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앞서 언급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33평형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12억을 훌쩍 넘어, 반포는 물론이고 남한에서 시세가 가장 높다. 교통의 편리,⁴⁴⁾ 학군⁴⁵⁾ 등의 주변 환경과 함께 래미안이 형성·창출한 이미지의 가치 차이가 아니겠는가? 삼성물산이 말하는 전략적 마케팅, 마케팅 전략인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도 강남 바깥의 상대적으로 넓은 도시공간에 래미안은 드물다. 특히 중랑구와 노원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그리고 강동구에는 래미안 단지가 단 한 개도 없다. 종로구도 마천가지로 단지가 없고 중구에는 한 개가 있지만, 이 지역이 지닌 도심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에 반해 서울 주변부에 해당하는 중랑구 등 많은 지역에 래미안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은평구에 2개인 단지는 강북에 3개, 성동구와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4개를 두고, 도봉구에서도 5개에 그친다.

44)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정문 앞 도로로 채 1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9호선 신반포역이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3, 7, 9호선이 모두 통과하는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있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입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사실과 함께, 삼성물산 건설과 대중교통 구축의 정치경제학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5) 마천가지로 반포래미안퍼스티지도 학군이 탁월하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사립 계성초등학교를 끼고 있다. 또한 세화고등, 세화여고 등 사립학교를 근처에 두고 있어, 학군을 따지는 강남 학부모들에게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이주는 일종의 필수사항으로 꼽힐 정도다.

사당동과 상도동을 포함하는 동작구에도 래미안 단지가 6개가 들어서 있다. 한편 마포는 15개로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래미안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신)공덕동 쪽에 거의 절반이 몰려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2개와 9개의 단지가 있다. 요컨대 강남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도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래미안이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나는 지리적 분포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강남에 비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여전히 지하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도심에서 가깝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이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의 일방적 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된 곳이었다. 앞서 언급한 공덕동의 경우에도 재개발 붐이 한참 일어난 곳이었다. 뉴타운 재개발과 삼성물산 래미안 사이의 선후를 따지기 쉽지 않을 밀접한 연관성. 지자체 권력과 자본의 사업적 밀착. 삼성물산의 주택 사업은 사실상 강남의 차별적 공간구축과 강북 뉴타운 재개발 사업연계의 투 트랙(two-track) 전술을 택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북에서도 강북에 해당하는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삼성물산과 뉴타운 프로젝트, 래미안과 재개발 계획의 연계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에 편승하여, 재개발에 지정된 지역의 땅을 싸게 구입하고, 그곳에 래미안이라는 아파트를 지어 그 보장된 ‘브랜드’ 명성으로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삼성물산은 이 지역을 파고든다. 그리고 그렇듯 집요하게 들어선 래미안의 건축물들은 강북의 공간지형, 주변경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총 21개의 래미안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선 성북구와 동대문구는 가히 래미안 클러스터(cluster)에 다름 아니다.

우선 동대문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청량리 민자역사 건설과 시점을 같이 하여, 전농과 답십리 지역에는 일찌감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90만 평방미터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2003년 11월 시작하여 2016년에 끝날 이 뉴타운 사업을 통해 13,856 세대의 아파트가 청량리 뒤편, 서울시립대학과 신답역 사이에 들어서게 된다. 삼성물산은 2013년 4월 이 뉴타운 안에 2,397세대의 거대한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입주를 끝

낼 것이다.

2014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총 2,652세대의 답십리 래미안위브까지 합치면, 이 뉴타운에서 삼성물산의 아파트/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1/3(36%)를 넘어선다. 대단한 비중이다. 삼성(물산)을 위한 뉴타운 재개발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답십리 뉴타운 조감도〉



*출처: 〈한국경제〉

한편 삼성물산은 이근 장안동에 2003년 이미 첫 번째 레이안을 지어 올려놓는데, 558세대의 장안래미안1차다. 4년 후 같은 장안동에 1,786세대 래미안2차를 추가로 세운다. 용두동 등지에도 래미안의 거대한 성벽이 들어선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은 어떻게 뉴타운 재개발의 상당 사업을 떠맡는 주체가 되었는가? 말을 바꿔, 이명박에서 오세훈으로 이어진 서울 강북 뉴타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거대 물산 삼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삼성물산은 어떤 전략과 안목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주변에 이미 래미안을 짓기 시작했으며, 서울시는 어떠한 이유로 삼성물산이 미리 주목한 동네를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선정하였는가? 우연한 겹침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연동인가? 선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삼성/물산-이명박/오세훈-뉴타운/재개발의 삼각동맹. 그 결과물로서의 래미안.

삼성(물산)이 결정하는가, 서울시가 판단했는가, 아니면 양자가 공의(共議)한 결과인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며, 적절한 조사와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대목이다. 확실한 것은, 전농답십리 뉴타운 내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들이 모두 ‘주택 재개발 추진’을 통해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재개발위원회 구성과 기존 대지 및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 사업승인을 대가로 한 일정 보상, 회유와 겁박, 퇴거와 철거의 과정을 치른 것들이었다.

5. 장위·이문 뉴타운 계획과 의릉 주변의 래미안 벨트

오랫동안 그곳에 있던 가난한 삶들이 축출된다. 도심을 떠돌며 노동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다수의 노동빈민들이 희생자다. 홀로 독거하는 노인이나 슬럼의 생활을 강요받는 실업자, 무직, 잉여 청년들이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는다. 오랜 빈민·노동계급 거주지였던 청량리 일대의 많은 다세대·다가구 세입인구들이 오랜 혹은 일시적 거주의 터로부터 쫓겨나 지하 단칸방으로 스며들거나 ‘고시원’으로 올라간다. 서울 바깥의 더 짙은 지역으로 밀려난다. 이렇듯 낡은 집과 빈난한 생계 그리고 빈곤한 가구의 구축(驅逐)을 전제로 해서 구축(構築)된 게 저 화려한 뉴타운의 안온해 보이는 래미안인 셈이다.

그렇다면 분양가 4억에서 7억8천을 호가하는 이 초거대 건축 뉴타운 래미안을 사들일 수 있는 선택한 구매자는 누구일까? 흥미롭게도 2011년에 분양이 시작된 전농답십리뉴타운 내 삼성물산이 지은 답십리래미안위브(총 2,652 중 80세대)와 래미안전농크레시티(총 2,397 중 10세대) 둘 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2013년 5월 현재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탓이 크고, 그 만큼 아파트 투자·투기열이 냉각된 이유도 많지만, 그 만큼 고가 아파트 구매 수요·능력이 이 지역에는 별로 없다는 현실의 반증은 아닐까?

삼성/래미안은 위 지도에서처럼 성북구의 지형을 완전하게 바꾼 길음/뉴타운 과도 역사를 같이 한다. ‘길음’과 ‘뉴타운’, ‘래미안’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통용

된다. 동일한 공간 대상을 지시하는 기표들이다. 길음에만 삼성물산은 무려 8개의 래미안 단지를 조성해 놓았다. 2003년 1,125세대 1차 래미안에서부터 2010년의 1,254 세대 9단지 래미안에 이르기까지, 삼성물산은 총 5,533 세대의 아파트를 길음뉴타운 지역에 건축했다. 과연 이들 강북 뉴타운에 지어진 ‘명품’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실 구매자·수요자는 누구일까? 뉴타운/삼성물산/래미안은 이론에서처럼 새 아파트를 삶터로 필요로 하는 도시 인구의 필요와 수요를 쫓는 것일까, 아니면 투자 능력을 갖추었거나 무리하게 투기하여 결국은 경매에 내놓게 되는 투자자들의 욕망과 환상을 부추기고 있는가?

서울시 일방적 뉴타운이 토목자본에게는 분명 특혜가 되고 또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는 ‘대박’의 꿈이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생활의 고통과 가구의 해체를 가져다주는 악몽이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 뉴타운 내 고가 아파트들도 능력을 갖춘 소유자나 세입자들에게는 다가올 미래의 평안이라는 환상 그 자체이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바로 지금 자신들의 생활에 들이닥친 악몽의 현실이지 않았을까? 폭력의 주택사업, 무력의 건축프로그램. 말 그대로의 빈곤 퇴출을 위한 스펙터클한 주거 바리케이트. 그게 혹시 뉴타운/재개발이자 그 핵심 주체인 삼성/래미안은 아닌가?

삼성 래미안 건축의 일방주의는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의 전제주의를 그대로 빼닮았다. 서울시의 토목 프로젝트를 삼성물산이 건설로 구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서울시/삼성물산, 뉴타운/래미안은 동체(同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지를 주변 공간으로부터 절단하고 그것을 수직적 건물, 무형의 자본과 연결시키는 이 거대 기계는 박원순 시장으로의 교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침 없이 작동 중이다. 그런 외부 조건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무서운 속도전을 펼친다. ‘작전’이나 ‘전략’이라는 표현이 전혀 생경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지대(地代)가 비교적 싼, 그렇지만 교통이나 학교 등 주변 환경이 좋아 투자 수요가 보장된 지역을 주목한다. 고려대학교와 동덕여대, K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KDI 등의 대학들로 일종의 환(環) 형태를 이루는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은 그 대표적인 지역이 된다. 6

호선과 1호선이 환승하는 석계역을 기점으로 해서, 1호선 방향으로는 이문동 재개발 계획이, 그리고 6호선을 따라서는 장위동 뉴타운 프로그램이 추진된 공간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05년 8월 29일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31만여 평과 성북구 장위동 55만 3,000평을 서울 3차 뉴타운 후보지에 추가시킨다. 당시 이문·휘경 지역에는 주택 5,500여 동에 14,00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장위동의 경우에는, 그 보다 많은 7,600여 동의 주택에 무려 28,000여 가구가 다세대·다가구 형태로 밀집해 있었다. 두 지역, 총 42,000 가구다. 한 가구 당 4인 가족으로 산정할 때, 두 곳에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대략 160,000만 명의 거주생활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림: 이문동과 장위동 뉴타운 후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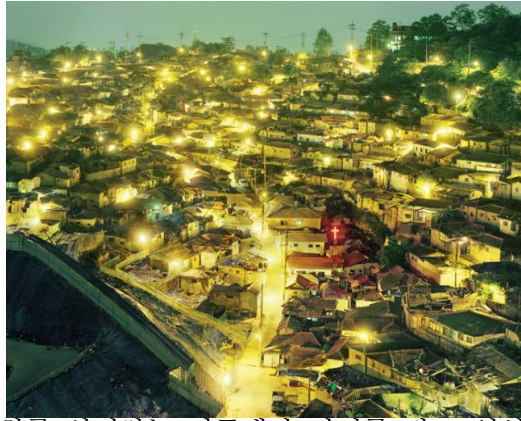


* 출처: 〈파이낸셜 뉴스〉

〈그림: 월곡 옛 달동네의 밤풍경〉

* 출처: 안세권

사실 동대문구 이문·휘경동과 성북구의 장위·석관동은 서울의 전형적인 강북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노동계급 및 빈민의 거주지로 성장해 왔다. 특히 6~70년대 전라도 등 지역에서 상경한 인구가 일찌감치 청량리 시장이나 경동시장과 인접하고 또한 동대문시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이들 지역에 터를 잡았다. 가난이 이 공간의 삶을 공통했다. 월곡에는, 위 안세권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도 서울 도시 대중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달동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짙은 주택공간을 가치 높은 아파트촌으로 변화시키려는 게 뉴타운 계획이었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12월 16일 3차 뉴타운 지구지정고시를 받는다. 조합이 결성되고, 전체 15개 구역 중 12개의 시공사 선정도 마친 상태다. 그렇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장위 1구역뿐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최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08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모든 구역을 해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의 30%, 나머지는 50%의 주민 반대가 있으면 뉴타운 재개발은 사업 중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문뉴타운의 경우, 2006년 1월에 최종적으로 지구지정고시를 받는다. 서울시는 “넓은 주택 등이 많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신이문역과 한국 외국어대 주변을 ‘녹색문화도시’로 개발할 것이다.⁴⁶⁾ 2008년 1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에는, 재개발 방식을 통해, 총 11,618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었다. 원래 거주하던 28,000가구 중 무려 16,400 가구를 뺀 수치이다. 이는 결국 기존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이 된다. 28,000 가구가 살던 동네가 16,400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하비(D. Harvey)가 말한,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⁴⁷⁾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닐까?

46) <문화일보> 2007. 12. 14. ‘이문·휘경 뉴타운 녹색문화도시로’.

47) Harvey, David(2006). *Spaces of Global Development: Towards a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London & New York: Verso, p.90.

빈곤한 대다수의 세입자는 물론이고 몇 억을 들여서 입주할 재정능력이 없는 상당 수 거주민의 방출·추방을 전제로 하는 뉴타운 재개발이다. 그 구조적 모순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1구역에서도 그러했다. 이곳에는 건폐율 19.75%, 용적률 225.13%를 적용 받아 지상 4~25층 아파트 36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임대 400가구를 포함한, 총 2,26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섰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고 아울러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신설동 89번지와 함께 이문동 264-271번지 지역의 해제를 공식 가결시킨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후문 담과 한국의국어대학교 후문 사이에 걸쳐 있는, 낡은 국민주택·판잣집들이 저렴한 다세대·빌라들과 뒤섞여 있는, 이문 1구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나머지 절반 구역의 주민들도 반대표 50%를 규합해서 뉴타운 재개발 반대에 나섰다.⁴⁸⁾

그리하여 이문동의 뉴타운 프로젝트는 장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안처럼 수월하게, 일방적으로는 추진되지 않는 형세다. 박원순이라는 만만찮은 시지자체 ‘레짐(regime)’이 등장했다. 이에 기대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원 거주민들의 여론 바리게이트에 맞닥뜨린 셈이다. 현재는 이처럼 시·주민 연합의 저지 세력과 자본·추진위 합동의 추진 권력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정전이나 휴전이 아닌, 냉전(冷戰)의 상태라고 하는 게 옳겠다.

“박시장의 남은 임기는 2년 정도다. 2년 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또 달라질 수 있다”⁴⁹⁾라는 전망이 단순히 부동산업계의 기대이자 욕망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을 통한 축적’을 생명선으로 하는 토목·아파트건설 자본의 입장에서 뉴타운, 재개발은 결코 호락부락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래미안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축적을 도모해야 하는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문·장위 두 곳의 재개발은 언젠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프로젝트로 남는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박원순 시장이나 50% 반대의 주민여론보다 현실

48) 한국예술종합학교 반대편의 래미안석관과 인접한 석관동의 일부 주민들도 50%의 지지를 얻어 뉴타운 반대외사를 밝히고 나섰다.

49) <한국경제> 2012. 2. 12. ‘장위뉴타운, 구역해제 가능 거의 없어’.

의 정치에서 더 힘을 갖고 있다.

6. 한예종·외대 사이/공간의 계속되는 공간정치

사실 삼성물산에게 이문동과 석관동은 래미안의 건축을 위해 비워야 할 땅, 공터가 아니다. 이미 래미안을 설립한 지역이다. 뉴타운과 상관없이, 혹은 그 계획을 정확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삼성물산은 이 지역에 이미 몇 개의 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문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되기도 훨씬 전인 2001년, 외국어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이의 구 삼익연립 자리에 이문삼성래미안 1차단지를 짓는다. 8개동 379세대다. 래미안 단지로서는 매우 작은 사이즈다.

2009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바로 옆에 14개 동 총 580 세대의 래미안석관이 완공된다. ‘청량근린공원 조성’,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 ‘꿈의 그린웨이 (Green-Way) 조성’을 약속하면서, ‘맞춤형 도시개발 추진’에 의해 들어선 단지다. 실제로 이 단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정(中庭)으로 취하면서, 새롭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懿陵) 주변을 근린공원으로서 접하고 있다. 강북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분위기로서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편 천장산 반대편에는, 앞서 말한 월곡 달동네를 밀어내고 2007년에 들어선 787세대의 월곡래미안투나밸리가 있다. 이렇듯 래미안은 뉴타운에 앞서 석관·이문의 공간을 재개발하면서 그곳에 들어서 있다. 방향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래미안은 천장산의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터를 잡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남쪽에 입지하는 것이며, 기존의 터를 더욱 확산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삼성물산에게 석관동과 이문동은 결코 새로운 투자처가 아니다. 이미 투자개발이 시작된, 포기할 수 없는 건설의 현장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선언한 이문1지역을 제외한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은 여전히 삼성물산의 전략적 사업 지역으로 남는다. 이문1지역의 경우에도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정권의 교체와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쫓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병박과 오세훈 뉴타운 추진 세력들이 퇴출된 상태에서도, 재개발 현장에서 삼성물산은 여전히 실질적 추진 주체로서 그 권력을 발휘한다. 잠재와 실재의 현실을 오가는 삼성물산은 명백히 뉴타운-재개발의 현실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우선 개발이 추진될 곳은 3-1구역이고 또 3-2구역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보다 진하게 칠해진 구역이다. 우선 지하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한 이문3-1 구역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2017년까지 지하5층, 지상 2~50층 건물 18개 동이 들어선다. 총4,2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이미 KCC의 웰츠타워가 들어섰고, 이마트가 입점한 상태다. 만약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외국어대학과 외대앞역 사이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뀔 것이다.

대학가 앞의 저렴한 음식점, 술집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대학생들이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월세·전세집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과거 대학가 근처에서 봤던 ‘하숙방’과 같은 거주 행태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대학 공동체는 더욱 심각한 주거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고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50가구는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⁰⁾ 지역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그래서 해소될 수 있을까?



출처:연합뉴스 -

〈그림: 이문·회경 뉴타운 이문3구역 위치도〉

50) <연합뉴스> 2011. 7. 20. ‘서울 이문뉴타운에 4천292가구 공급’.

〈그림: 이문 3-1구역과 3-2구역의 상세도〉



출처: C.News

아울러 주목해 볼 것은, 한국예술학교 미술원·전통원과 의릉의 서면 경계를 따라 천장산 방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이문3-2구역이다. 크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의릉과 바로 붙어 있고 천장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급한 주거지 재개발의 입지로서는 매우 매력적이다. 과거 중앙정보부요원들을 위한 주택이 쪽 들어서 있던 이 지역 바로 옆에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70년대 서울 중산층을 위해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아득한 분위기의 삼익주택이 있다. 삼성 래미안1차 4개동과도 이웃한다.

2011년 확정된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용적율은 기존 90%에서 75%로 내려갔다. 고도제한을 받아 지상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에, 기존보다 48 가구가 줄어든 152 가구가 들어설 것이다. 거대 건설자본이 눈독을 들이기에는 너무 협소한 구역이라 하겠다. 훨씬 큰 단지 형태로 래미안을 짓던 삼성물산은 과연 이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둘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공간이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설 즉 도시 재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삼성(물산)이나 공간 민주주의와 주민 자율주의의 관점에서 도시를 (재)설계해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문1지역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의 슬럼(slum)이다. 한국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이/공간에 남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 하나다. 바로 이곳에서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공간 (재)개발의 계획과 이에 맞서 생활을 보호코자 하는 주민들 간 중대한 공간투쟁(공투:空鬪)가 벌어지고 있다.

2011년 4월 이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했다. 삼성물산은 다음과 같은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림; 이문1지역의 삼성 래미안단지 조감도〉



*출처: 삼성물산

계획에 따르면, 지하 4층~지상 26층 아파트 38개 동이 예술학교와 한국외대 사이/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건립 가구 수는 원래의 2,262에서 2,429로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는 225.13%였던 기존 용적률을 239.8%로 높여주는 대신에, 서민주택 167가구를 더 짓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다. 또한 서울시는 “이 중 56.7%인 1,378가구를 늘어나는 1~2안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로 구성했다”고 설명할 것이다.⁵¹⁾

삼성물산이 이문동에 야심차게 건설할 또 하나의 래미안 단지다. 만약에 이 대규모 래미안 단지가 완성된다면, 삼성은 천장산과 의릉의 동서남북을 하나의

51) <한국경제> 2011. 4. 24. ‘이문뉴타운 1구역에 2,400가구’.

거대한 띠로써 둘러쌀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천장산과 의릉,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예술학교는 이 래미안 벨트를 위한 중앙공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어느 단지도 제공하기 힘든 최고의 풍치이자 최상의 전망이다. 21세기 서울 강북은 물론이고 강남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이상향적인 아파트 조감도다. 말 그대로의 ‘미래의 다가올 평안’이다.

삼성물산은 인근의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된 ‘녹색문화 도시’를 약속한다. 또한 래미안은 경희대,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문화 도시’를 제공할 것이다. 고등학교와 공공부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며, 2016년 계획대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 사이/공간에 있던 달동네 판잣집들과 노후한 빌라들, 다세대들은 현실에서 완벽하게 청소된다. 이 동네에 들어서 있던 점집이나 ‘방석집’들도 과거 연탄공장의 기억과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멋진 신세계다. 기존의 복잡다기하고 불량하며 가치 없던 주거형태들은 래미안이라는 균질의 투자가치 높은 거주 형식(uniform)으로 변환된다. 복잡하고 좁고 더러운 골목길을 따라 계획 없이 달라붙어 있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삶들은 넓고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건축된 단일한 아파트 생활로 환수된다. 구질 구질한 동네가 사라진 곳에 구축될 아름다운 아파트 커뮤니티다. 골목이라는 공동점유의 공적공간은 철저하게 구획된 사적공간의 편의시설로 대체된다.⁵²⁾ 집집마다 나와있던 채소나 꽃을 키우는 ‘바깥’, ‘다라이’들도 관상용 꽃들로 가득한 미니정원으로 바뀔 것이다.⁵³⁾

52)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를 ‘공적공간의 파괴(the destruction of public space)’. ‘건축적 공적 영역의 사사화(the privatization of the architectural public realm)’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Davis, Mike(1990).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London & New York: Verso, p.226~228.

53) 보디(K. Boddy)는 (탈)현대 도시 대중들이 화분에 꽃을 가꾸는 행위(potting)나 ‘창틀의 정원(window gardens)’을 두고, 가정과 거리, 실내와 외부, 집과 도시 사이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풀어낸다. Boddy, Kasia(2010). ‘Potting’ in M. Beaumont & G. Dart(eds.). *Restless Cities*. London & New York: Verso, p.213~231. 이러한 사이/공간을 통해 실내의 사적인 일상은 거리로 나오고, 반대로 외부 거리의 공적인 풍경은 개인의 처소로 스며든다. 이런 감각적 상호 접침의 공간이 풍성할수록 도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며, 그 패쇄나 배제는 도시 공간을 삭막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런 저런 꽃이나 채소들을 많이 키우는 가난한 동네를 산책할 때 더 많은 ‘정’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집마다 있던 낡은 철재 대문을 대신해서는 ‘래미안’으로의 입성을 환영할 커다란 게이트가 설 것이며, 그 아래를 자동차들이 미끄러지듯 오가고 그 옆을 행복한 표정의 주민들이 산책할 것이다. 뽕죽뽕죽 유리병조각을 쫓은 시멘트 담벼락은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낮은 나무로 덮인 경계선과 눈에 잘 띄이지 않는 CCTV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주거의 이방공간’, ‘길이 없는 도시의 섬’이 생겨난다.⁵⁴⁾ 빈곤의 이웃을 대신하여 환상의 공동체가 들어선다. 2016년에 완공될 미래의 현실이며, 바로 이런 미래의 현실을 통해서만 삼성물산의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바로 이 미래의 현실, 미래의 약속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공투가 폭발한다. 50% 이상 결집된 뉴타운·재개발 반대 주민 의사가 삼성물산의 래미안 벨트 설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주민 반대 여론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법원의 판단이 삼성물산에게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삼성물산이 약속한 미래의 조망도가 계획처럼 2016년에 완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자본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도 아닌 것이기에, 현재의 공투는 말했듯이 냉전 상태에 있다는 게 맞다.

7. 나가면서: 신고서점이라는 공간 바리게이트

지금 천장산을 둘러싸고 석관동·이문동에서는 삼성(물산)이라는 골리앗과 현 지슬럼주민들의 연합이라는 다윗 사이에,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와 같은 운명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사소한 일상의 생활을 통해 도시 서울의 의미를 쓰는 사람들과 도시 재개발 자본이라는 거대한 자본 사이의, 미래가 내다보이는 싸움이다. 재개발 자본 권력과 자기 보존적 주민 역능 간 비대칭적 교전은, 현재로서 잠복상태다. 그래서 조용하다. 싸움은 결코 끝난 게 아니며, 오직 지연 중을 따름이다.

거주지 보존에 나선 도시 주변부 주민들과 아파트 단지 개발을 통해 축적을

54) 김성홍(2011). 『길모퉁이 건축』, 서울: 현암사, p.265~267.

도모하는 자본의 피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산자유주의 대치 국면. 바로 그 지연전(선)의 중심에 신고서점이라는 오래된 서점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헌책방의 늙은 주인이 반대파 50%의 획득을 주도한 위원장으로 나섰다. 삶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다. 일방적 뉴타운 재개발과 자본의 독재에 비판적 관심을 가진 우리가 대학촌의 오랜 풍경이기도 했던 신고서점에 주목하는 이유다. 책의 수집과 교환, 매매를 위한 일개 헌책방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고서점은 미디어·문화 공간이자 기억·기억의 보관소로서만 소중한 게 아니다. 삼성물산과 같은 거대 자본이 추방할 문화가 무엇이고, 특정한 인구의 생활에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 그리고 삶의 보존을 위한 어떠한 저항과 연합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인식의 포인트다. 우리가 중요한 역사시간 속에 위치함을 알려주는 학습채널이다. 구체적인 행동요청의 스테이션이자 다양한 활동결집의 플랫폼이며, 생기 있는 (반 자본)교전의 비트(beat)가 된다.

이문동·석관동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모순의 천체를 집약한 모나드(monad) 중 하나인 신고서점. 래미안/삼성물산/자본/산자유주의의 연쇄에 저항하는 주민·활동가·예술학교 반란자들의 접소(接所)가 될 수 있을까? 헌책방을, 레베카 솔닛(R. Solnit)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함께 읊고, 이문동이 지닌 노동과 빈곤의 오랜 공간의 기억을 되짚으며, 석관동의 역사를 수집할 지적 네트워크의 결집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To lose the people who know a city, to lose a lot of them quickly, is like burning its library."*⁵⁵⁾

55) Solnit, Rebecca & Schwartzberg, Susan(2000). *Hollow City: The Siege of San Francisco and the Crisis of American Urbanism*. London & New York: Verso, p.143.

□ 5차 토론회 :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삼성 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기업은 노동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에 개입하여 왔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산업발전단계에 적합한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자본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팽창-대학정원의 확대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를 한축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특히 1970년대 한국독점자본의 교육적 요구가 수출지향적 제조업체의 생산직노동자의 대량조달을 위한 중등교육 평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⁵⁶⁾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설립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는 대졸자와 고졸간 임금격차가 70년대이래 고착화되면서 전 계층적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자본은 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⁵⁷⁾

최근까지 교육에 대한 자본의 개입은 국가의 정책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실업계 특목고의 등장, BK21 정책과 대학의 특성화 추진 등을 통해 자본의 요구에 복무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기 대학평가에 취업율을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본에 대한 대학교육의 종속은 심화되었다. 그런데 취업율이 대학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기업의 대학에 대

56) 강순원,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한길사, 1990

57) 2010년중반의 상황은 노동력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과잉화가 노정되면서 대학정원의 축소를 목표로 한 대학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개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아가 대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매개로 대학을 직접 인수하거나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1. 고등교육에 대한 대기업의 개입전략

자본의 고등교육에 대한 직접적 개입전략은 산학협력, 계약학과 설립, 사립대학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기업은 대학과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대학 내 협력연구소 설립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창업교육 내실화, 기술·특화·아이디어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진행된 산학협력 진흥성과⁵⁸⁾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산학협력단, '03년 25개에서 '12년 334개(77.3%) 대학(전문대 포함) 설치
- 대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 회사('12년 23개), 자회사('12년 106개) 운영
- 기술개발·기획·생산 등 기업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기업 운영('12년 241개),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산업단지 캠퍼스 10개교 설립 인가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추진, 산학협력 중점교수 1,425명('12.9기준) 활동 중

둘째, 계약학과는 막대한 투자여력이 있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고등인력의 신속한 수급을 위하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적시에 인력을 양성하고 자사 내 종사자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충족의 기능을 병행⁵⁹⁾한다.

계약학과는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나누어진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4.1일 기준) 105개 대학의 계약학과에는 12,27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11년(11,171명) 보다 9.9%(1,103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8) 교육부 보도자료,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13.12.12

59) 김재민, 계약학과 효과성에 대한 질적 연구, 20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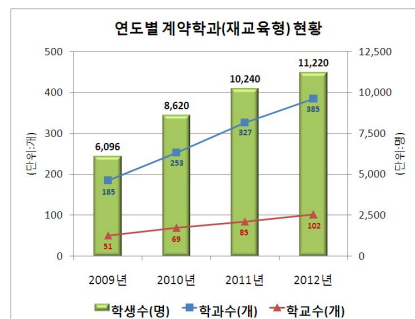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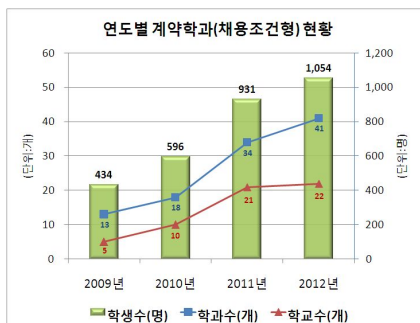
〈 2012년 계약학과 현황 〉

(단위 : 개, 명)

구 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전문 대학	대학	대학 원	합계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합계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합계
채용 조건형	1	20	1	22	1	8	26	6	41	33	542	436	43	1,054
재 교육형	14	84	4	102	32	166	143	44	385	1,270	6,037	3,444	469	11,220
합계	14	86	5	105	33	174	169	50	426	1,303	6,579	3,880	512	12,274

※ 학교 합계란의 학교수는 학교 중복을 제외한 수임

유형별로는 채용조건형 41개 학과 1,054명, 재교육형 385개 학과 11,220명이며, 학위별로는 전문학사과정 1,303명, 학사과정 6,579명, 석사과정 3,880명, 박사과정에 512명이 재학하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재학생은 2011년 34개 학과 931명에서 41개 학과 1,054명으로 123명이 늘었으며, 재교육형의 증가율(9.6%) 보다 높은 증가율(13.2%)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맞추어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신규 사원의 채용 및 재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60) 교육부 보도자료, '고졸 취업시대에 계약학과로 학업 계속', 2012.7.12

셋째, 대기업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배는 두산과 삼성, 포스코가 중앙대와 성균관대, 포항공대 법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소주의 학교들은 대학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선도학교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산은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기존 18개 단과대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어 10개 단과대학을 다시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경영경제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5개 계열로 학문단위로 나누었다. 여기에 각 계열별로 5명의 부총장을 임명해 자율적인 운영을 맞기는 '책임부총장제' 시행하였다.

중앙대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목표를 ▲ 대외 경쟁력이 있는 학과 육성 ▲ 유사·중복 학과 통합을 통한 교육 수월성 제고 ▲ 국제 사회가 선호하는 인재 양성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대의 기초 학문 학과들을 학부제로 전환하는 것과 어문계열의 명칭변경과 학부제 전환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자연대의 기초학문 단위는 학과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어문계열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일어일문·중어중문·비교민속학 전공을 '아시아문화학부'로 묶고, 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 문학을 '유럽문화학부'로 통합시켰다⁶¹⁾

삼성은 1996년 성균관 대학 재단을 인수한 이후 1조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재단 인수 전 학생 1인당 387만원이던 교육비가 1856만원으로 5배로 뛰었다. 교수들의 교육연구업적평가와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휴대폰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초고층장대교량학과, 보험금융학과 등 계약학과를 신설하였다. 삼성의 성균관대 인수는 삼성병원의 의과대 충원체제마련, 계약학과 신설 등의 직접적 목표달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성균관대학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의 대학서열상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삼성노동력 확보의 핵심 통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 삼성이 각 대학총장들에게 추천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삼성이 대학에 대한 지배력을 공식화, 가시화하는 것이었으며, 성균관대학에 대해 총장추천인원 할당

61) 최지용 '두산의 중앙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나①' 오마이뉴스.2011

을 늘림으로써 성대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⁶²⁾

●삼성 신입채용 대학총장추천 인원 할당 현황		(단위:명)					
성균관대	115	전남대	40	숙명여대	20	삼육대	10
서울대	110	동국대	40	한동대	20	강남대	10
한양대	110	광운대	35	성신여대	15	목포대	10
경북대	100	전북대	30	서울여대	15	호남대	10
고려대	100	서울시립대	30	상명대	15	제주대	10
연세대	100	이화여대	30	인천대	15	한밭대	10
부산대	90	한국외대	30	명지대	15	한예종	8
인하대	70	송실대	30	가천대	15	동신대	8
경희대	60	단국대	30	동덕여대	13	건양대	8
건국대	50	국민대	25	창원대	12	대전대	8
영남대	45	동아대	25	한성대	12	우송대	6
부경대	45	강원대	20	경남대	10	한세대	6
중앙대	45	경상대	20	대구대	10	성공회대	4
아주대	45	세종대	20	덕성여대	10	〈출처: 한국대학신문〉	

이는 삼성이 대학에 대한 전반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에 고용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삼성-성균관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노동력확보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직원의 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삼성자사고를 설립함으로써 삼성의 교육개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삼성자사고가 성균관대학 진학의 주요 통로가 된다고 할 경우 삼성자사고-성균관대-삼성으로 이어지는 삼성직할의 교육 트랙이 형성되는 것이다.

3.삼성의 자사고 개입과 대기업 자사고의 위헌, 위법성

1)삼성의 자율형사립고 설립과정

62) 삼성의 총장추천제는 학벌사회 및 대학서열화의 공식화, 재벌의 대학지배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되었지만 이 파장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자사고는 기존사립학교의 자사고로 전환과 대기업의 자사고 설립으로 추진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시작하여 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학교들은 일반자사고와 달리 기업임직원자녀들을 일정비율로 뽑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설립 자율형사립고 현황〉

	학교규모	임직원자녀전형비율	지역
현대청운고	176명	15%	울산
광양제철고	385명	70%	광양
포항제철고	455명	60%	포항
충남삼성고	350	70%	아산
하나고	200	20%	서울
하늘고	225	44%	인천

〈대기업의 자사고 추진 현황〉

기업	학교규모	임직원자녀비율	
포스코	720		인천
현대제철	300~450		당진
한국수력원자력	360		경주

삼성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94년 중동학원을 인수하고 1996년 성균관대를 인수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 100개 플랜을 추진하자 2009년 중동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중동고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와 같이 임직원자녀에게 특혜를 주도록 변경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중동학원 철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2년 충남 아산에 삼성임직원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충남삼성고 설립을 추진하였다.

〈충남삼성고 설립과정〉

중동학원	은성학원
-삼성그룹 1994년 인수해 운영 -2009년 자사고로 지정 운영 -2010 삼성그룹 서울시교육청에 '임직	

<u>원 자녀 선발권' 요구.</u> -2011중동학원 이사장(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사(김수근 삼성물산 부사장),감사(강재영 삼성미소금융 이사장)직에서 철수 -2011.11.22일 중동고 동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철수 규탄대회 개최 -삼성그룹 홍보실 "성균관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직원자녀 특례입학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이 그렇게 한다면 사회가 용납하겠느냐"고 말했다.	
	-2012. 7.31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학교법인 은성학원 이사장으로 설립신고서 제출 -2012. 09.28. 계획승인 -2014.. 03.01. 개교예정

충남삼성고의 학교법인인 은성학원은 이사회를 삼성그룹 3인, 성균관대 교수 1인, 충남도교육청 1인, 서울대, 서울교대 각 1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삼성의 학교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충남삼성고는 전체학생의 70%를 임직원자녀전형으로 뽑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전자 임직원자녀를60%와 삼성계열사 임직원 자녀를 10%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제철고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사고는 없다.

〈2014년 충남삼성고 입학전형〉⁶³⁾

가. 모집 정원 : 10학급 350명 (남·녀 구분 없음)

모집구분		정원
정원 내	충남 미래인재 전형	35명
	사회통합 전형	70명

63) 충남삼성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전형

	임직원자녀 전형	A군	210명
		B군	35명
정원 내 소계			350명
정원 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10명
	특례입학 대상자		10명
합 계			370명

나. 공통 지원자격

- 1)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다. 임직원자녀 전형

1) 임직원자녀 전형 A군

- ① 입학전형 공고일 기준(2013.09.16)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전자(TP센터 또는 온양사업장 소속에 한함)에서 근무 중인 자의 자녀
- ② 입학전형 공고일 기준(2013.09.16)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 중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의 직원 및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인 자의 자녀

2) 임직원자녀 전형 B군

- ① 입학전형 공고일 기준(2013.09.16)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중 '임직원자녀 전형 A'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사의 충남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의 자녀

삼성자사고는 법인설립 취지서에서 '삼성관계사 임직원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

서 양질의 자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우수 대학 진학, 개교 3년 후 국내 최고의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며 한국의 리딩 컴퍼니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우수 인재의 확보, 유지를 통한 디스플레이 사업의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교육단지를 조성하여 삼성관계사 임직원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양질의 자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균형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은성고등학교는 설립자의 교육적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내 우수 대학 진학, 개교 3년 후 국내 최고의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⁶⁴⁾

충남삼성고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제공하며, 창의적인 과학 공학 인재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충남삼성고 졸업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술, 신소재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통하여 인류가 더욱 행복해지고 세상이 더욱 평화롭게 되길 기대”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⁶⁵⁾

삼성자사과의 목표를 국내우수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삼성이 지배하고 있는 성균관대학이 대학진학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계 등을 통해 성균관대학의 발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대학입시에서도 수시모집에서 성균인재전형으로 수시모집의 27%를 선발하였다.

64)은성학원 법인설립 취지서.2014 국감자료

65)충남삼성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장 인사말

〈표〉 성균관대학교 201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선발비율	▶ 수시(2,961명) : 정시(813명) = 77% : 23% ▶ 성균인재전형 확대(805명) - 입학사정관전형을 ‘성균인재전형’으로 통합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서류 100%로 490명 우선선발 - 서류제출 간소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으로 평가
수 시 (2,961명)	▶ 일반학생전형(논술형) 1,315명 선발 - 우선선발 백분위(수학, 영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추가 - 우선선발 70%, 일반선발 30% 선발 - 수능시험 이후 논술 실시 ▶ 의예과 수시모집에서 18명 선발 - 성균인재 5명, 과학인재 8명, 일반학생전형(논술형) 5명 ▶ 정원외 특별전형 수시모집 전환 - 지역리더(농어촌지역 학생) 138명, 특성화고 졸업자 49명, 이웃사랑(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5명, 장애인 등 대상자 10명

충남삼성고의 설립은 임직원자녀를 위한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삼성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삼성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균관대 등과 결합하여 〈삼성 자사고-성균관대(또는 명문대진학) - 삼성〉으로 이어지는 2세의 삼성시스템 구축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자녀의 선발이 보장되지 않았던 중등고에서 후퇴와 충남삼성고의 설립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자사고의 반교육성과 위험성

충남 삼성고를 포함한 자사고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교육적인 학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계획하고 있는 공교육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위험적 학교이다.

(1)자사고의 반교육성

첫째, 자율형사립고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반

교육적인 학교로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

자사고는 평준화체제를 해체하고 입시명문고로 기능하고 있음. 비평준화체제의 핵심인 특목고와 자사고는 상위권 대학진학을 목표로 우수한 동질집단의 학생을 선발(입학)하는 입시전문 학교일뿐임. 그들에게는 특수한 목적도 없고(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외고에 가는 학생은 없다.) 교육적 자율성(자사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은 없다.)도 없다. 그들은 입시 전문학교로서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의 서열화를 넘어 학교의 계층화를 야기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되기 전의 비평준화 시절의 고등학교 체제는 단지 입학생의 성적에 따라 형성된 서열화 체제였다. 학비는 동일하였고, 학교의 환경이나 조건도 비슷하였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비평준화 체제는 서열화를 넘어 계층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를 슬럼화시키고 있다. 학생선발권을 통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독점하고,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 일반고의 경우 학습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저하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에서 이류학교, 삼류학교로 낙인찍히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제로 한 일반고 강화방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준화지역의 경우 성적제한을 없앴지만 여전히 부유층 학교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며, 비평준화지역과 기업설립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생선발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2) 자사고의 위헌·위법성

첫째, 자율형사립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제도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⁶⁶⁾

66)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31조 1항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말하며 가문·사회적 지위·경제적 지위 등 비전속적인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능력에 따른 차별 이외에 경제적·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소극적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으로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⁶⁷⁾

또한 헌법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학교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⁸⁾ 여기서 학교제도라고 함은 학교의 체계(학교의 종류와 그 전체적 구조), 의무교육제, 학교배치기준, 학구제, 학년제, 입학·졸업요건, 조직편제(필수과목 등) 학교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근본적인 체계를 의미하며 이것들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7) 헌재 2000. 4. 27. 98헌가16;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68)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적용되어야 할 교육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회제민주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체제와 같은 사회전체에 공통된 근간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요청하는 바이다.⁶⁹⁾

자율형사립고는 위법적인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한시적 실험학교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자사고 시행령은 이를 항상적인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61조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육과정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와 대등한 학교유형으로 분류하여 학교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결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고등학교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

69) 김명연,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방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자료집, 2013

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적용되는 특례는 각각 교장과 교감의 자격(제24조 제1항), 학교의 학년도(제23조 제1항), 학년제(제26조 제1항), 교과용도서의 사용(제29조 제1항), 학교 운영위원회(제31조), 수업연한(제39조, 제42조, 제46조)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율형사립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차별화를 제도화한 학교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형자사고의 학생선발과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특례는 학년,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연한 등이지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특례를 주도록 한 규정이 없다.⁷⁰⁾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를 대기업에 넘겨 재벌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학교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삼성은 아산탕정지역에 삼성직원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충남삼성고를 설립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첫째, 고등학교 설립은 지역의 고등학교 정원과 학생수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세워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를 비치한 자율형사립고가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를 세울 경우 해당지역의 삼성직원 자녀들이 배정받을 수 있다. 오히려 충남삼성고의 경우 모집지역이 충남전체이기 때문에 인근 삼성직원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먼 지역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삼성고는 설립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인근지역 학생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70) 김명연,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방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자료집, 2013

〈전체 토론회 일정〉

○ 제1차 토론회: 삼성재벌의 지배구조와 축적방식

- * 이재용 시대, 삼성재벌의 지배구조: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 * 삼성전자와 양극화 축적체제: 이병천(강원대)
- * 법을 조롱하는 자들: 삼성의 세습과 불법 및 초법적 탈법행위: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 토론: 박승록(착한자본주의연구원),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고영남(인제대)
 - 사회: 조돈문(가톨릭대)
- # 일시: 12월 13일(금), 오후 2-5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 제2차 토론회: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 *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자 조직화: 조돈문(가톨릭대)
-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현주소: 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과 노동권의 실종: 김진희(경희사이버대)
- *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토론: 이승협(대구대), 박진(다산인권센터), 이종란(반올림);
 - 사회: 이병천(강원대)
- # 일시: 12월 20일(금), 오후 2-5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206호)

○ 제3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책임

-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김정주(한양대)
- *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비판적 검토: 이승협(대구대), 신태중(함께하는시민행동)
- * 삼성전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 강병구(인하대)
 - 토론: 이정환(미디어오늘),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세은(충남대)
 - 사회: 이병천(강원대)
- # 일시: 2014년 1월 10일, 오후 2-5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제4차 토론회: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 * 삼성의 인사노무관리 방식: 삼성의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는 없는가?: 류성민(경기대)
- * 삼성의 하도급, 과연 상생인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 * 삼성광고의 변천으로 살펴본 한국사회 지배담론의 변화: 전승우(동국대), 지주형(경남대),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토론: 조건준(금속노조), 조성재(한국산업노동학회), 성현석(프레시안)
- 사회: 조돈문(가톨릭대)
- # 일시: 2014년 1월 24일, 오후 2-5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제5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 * 경제발전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삼성공화국'론: 송태수(한국산업노동학회)
- * 삼성의 법조 지배: 사례와 대안: 김성진(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 삼성은 아파트공화국이다: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 * 삼성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 김학한(전교조)
- 토론:곽정수(한겨레신문),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김일현(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박준영(아산평학)
- 사회: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 일시: 2014년 2월 7일, 오후 2-5시
- # 장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3층)

○ 제6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

- 사회: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1) 제1부[오후 2:00-4:00]: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
 - *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 박갑주(변호사)
 - *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 이보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 삼성의 언론지배: 경제·사회민주화의 걸림돌: 김서중(성공회대)
 - 토론: 조현연(진보정의연구소), 엄은희(한국공간환경학회), 정연우(세명대)
- 2) 제2부[오후 4:00-5:30]: 종합토론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 일시: 2014년 2월 21일, 오후 2-5시
- # 장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3층)